

(시장개방화 속 오리산업이 나아갈 방향)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했던가.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며, 축산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오리산업이 끝을 알 수 없는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겠지만 지난해 초 AI 발생으로 종오리가 대량 매몰처분됨에 따라 수급부족이 나타나 F1(후대) 오리의 불법부화가 크게 증가하면서 물량과잉 현상을 초래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시세 또한 지난해 최고 시세의 반 이하로 떨어졌고 냉동 재고 적체량도 한 때 1,200만수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자구적인 F1오리 불법 입식 근절 운동으로 올해 초 시세와 재고 물량이 다소 회복되는 듯했으나 또다시 시세가 근 10년이래 최저를 기록, 생산비 이하로

거래되면서 오리업계 불황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3.0kg 기준 생체오리 수당 시세는 4,400원으로 전년 동월 10,248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3%에 불과하다. 6천원의 생산비에도 한참 못미치다보니 업계에서는 ‘팔수록 손해본다’는 말이 돌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여느 때와 같이 ‘조금만 참으면 이 어려움도 지나가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관하기에는 오리업계 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계와 세계 정세가 너무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무역시장개방,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축산대국인 미국, EU 국가와는 이미 FTA를 체결, 발효된 상태이다. 흑자는 아무리 축

산대국이라 한들 오리산업에 직접 피해가 오는 것은 없으니 비교적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필경 잘못된 생각이다. 어차피 국민 1인당 섭취하는 축산물의 양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값싼 축산물들이 대량 수입될 경우 국내산 오리의 수요가 대거 수입축산물로 교체될 것은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간접피해라고 하기는 그 영향이 너무도 막대하다.

특히, 우리는 수요심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으로 이는 지난 2008년 AI 발생 당시 닭은 20~30% 소비량이 감소하는 반면 오리는 50~80% 까지 소비가 급감하는 현상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오리고기는 대체육류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국내산 오리고기 수요를 대체할 기회(수입산 증가, AI 등 질병 발생 등)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수요가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국내 오리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은 바로 중국과의 FTA 협상이다.

올해 초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조속 추진할 것이라 밝히는 한편, 지난 5월 2일에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했다.

그 날은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많이 소비하자는 취지에서 오리데이가 개최된 날이었기에 더욱 씩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오리고기 생산국으로 국내 오리산업과는 그 규모자체가 다르다. 농가수로만 보면 국내의 1,200배, 사육수수는 53배라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며 가격 역시 국내산보다 반 이상 저

렴하다.

현재는 중국이 AI 상시발생국으로 분류, 생육은 전면수입금지돼 국내산 오리자급율이 97%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지난 90년대에는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오리고기 유통시장의 30% 가량을 중국산이 점유하였다.

90년대 당시의 오리산업 규모 대비 현재는 몇십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한중 FTA를 체결할 경우 후폭풍은 국내 오리업계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검역의 지역화(SPS) 문제이다. 중국은 파키스탄, 뉴질랜드와의 FTA를 체결하면서 검역을 지역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검역의 지역화(SPS)란 AI 등 전염성 질병 발생시 국가 대 국가 개념이 아닌 지역 대 지역 개념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이같은 조항이 협상에 통과될 경우 국내 오리시장을 중국에 전면개방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해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의 9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의 경우에도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오리육에서 클로람페니콜(항생제)이 3차례나 검출되었는가 하면 중국산 훈제육 아질산나트륨 함량이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등 세계에서 식품사고가 가장 많은 국가로 그 어떤 식품도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같은 검역의 지역화(SPS)문제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초민감 품목으로 조정하여, 셰이프가드 품목지정 및 강화 등 오리업계를 보호할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오리산업, 희망은 있다.

필자가 오리육종강국인 영국과 프랑스, 세계 최대 오리대국 중국 등 오리로 유명한 나라를 돌며 각국의 오리고기 맛을 보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오리고기 육질만큼 고품질 오리육을 생산하는 곳은 보지 못했다.

확실히 그 어느 나라의 오리고기도 잡내 없고 부드러우며 탄력성까지 우수한 국내 오리육의 품질을 실현한 곳은 없었다. 특히, 훈제오리육의 경우 중국산과 비교하면 그 맛이 월등히 차이가 난다. 중국산 훈제오리는 훈연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잡내와 함께 질기고 퍼석한 육질이 느껴지지만 국내산 훈제오리는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육질, 은은한 참숯향이 더해져 풍미가 좋다. (실제 중국산 훈제오리가 많이 사용되는 웨딩홀, 뷔페식당 등의 오리고기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국인들도 국내산 훈제오리를 맛보면 크게 감탄하고는 한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국내 오리고기의 품질 경쟁력은 자부할 만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국내 오리산업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성장·발전해 오다보니 기반 시설이나 제도, 정책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데 있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은 국내 오리사육농가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형태의 간이축사시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농가는 대부분이 무허가축사로 분류돼 정부 지원·보조를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 방역 관리도 취약하다. 정부의 FTA 대책인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한정된 대상자와 지방행정과의 상충으로 쉽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문제 개선과 함께 오리분야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차원의 정책·제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다. 국내 오리산업은 특별한 육성지원정책 없이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성장해 왔지만 산업이 크게 성장하다보니 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이 어렵게 됐다.

최근에 지방조례에 의한 거리제한 강화와 축산분뇨 규제, 무허가 축사 단속, 축산허가제 도입 등 정책·제도적 지원보다는 규제와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국내에서 오리산업을 꾸려나가기가 점차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규제와 제재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상생하는 형태의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리고기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방안 모색과 다각화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내산 오리고기의 품질 경쟁력은 훌륭하다. 그렇다면 포화된 내수시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마켓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개선대책은 단지 개선하면 좋고 아니면 말 사항이 아니라 오리업계가 시장개방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대책과 다름없다. 이를 위해서는 사육부터 부화, 도압, 가공·유통업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오리업계 전체가 똑같이 오리산업의 흐름과 세계 시장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며, 정부와 협회, 종사자, 그리고 학계와 연구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소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